

## 21세기 우리나라 유통정책의 방향

이 상 용  
농림부 유통정책과장

### 1.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

WTO의 출범과 함께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농업과 농산물유통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외국의 선진대형 유통업체들의 국내진출확대와 함께 국내 대기업들의 유통산업 참여가 본격화 되고 있고, 이들 유통업체들은 소매점을 대형화 하면서 국내 전포망을 확대, 체인화하고 막대한 자금과 구매교섭력(Buying Power)를 바탕으로 생산자와의 대규모 직거래를 도모함으로써 농산물 거래도 종래의 도매시장 중심에서 점차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다양화되는 등 농산물유통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WTO체제하에서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격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매비축 등 정부 주도의 가격정책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최신 정보기술을 응용한 유통기구간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확대되고 EDI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농산물에도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며, 농가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영농·유통정보를 습득하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른바 Cyber Market 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식생활 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증가하고 있다

### 2. 그동안 유통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정부는 그동안 생산자에게는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되도록 싼 값으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과잉·과소생산과 이로 인한 가격불안현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유통마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농산물의 규격표준화나 하역기계화, 도·소매거래단계에서의 상인들의 불공정거래문제는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해결점을 못 찾고 있다.

유통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유통·가격구조에서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유통사업은 투자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유통사업에 대한 투자가 주로 시설·장비 등 H/W부문에 집중된 반면, 운영활성화를 위한 S/W성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됨으로써 규격표준화나 하역기계화 등 물류체계가 낙후되고 21C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추진방식 역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나 책임의 공유보다는 정부에 대한 의존심을 부추기고 자율적 수급조정노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농정의 중심이 판매보다는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정책지원 대상도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소외되고 민간유통업체의 참여가 위축되는 한편, 중간상인들의 역할이 무시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3. 향후 유통정책의 방향과 2000년 주요 추진시책

위와 같은 유통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체제와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농산물유통정책의 방향을 종전 정부 주도의 유통정책에서 앞으로는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 하는 한편, 농업경영에서 생산 못지않게 유통·Marketing을 중시하며, 정책 대상도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위주에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지향하고 유통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방향 역시 H/W 위주 투자에서 S/W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한편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농산물유통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 채소류에 대한 계약재배와 함께 가격예시제확대로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수급안정제도로서 유통협약·유통명령제를 도입시행하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조금제도를 확충하여 정부의 보조비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대상품목도 우유 등 축산물에서 과일·채소류 등 농산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선 농협이 중심이 되어 산지유통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규모화·전문화된 우수지역조합에 대해 중기저리의 협동조합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2000년에는 총 99개 농협에 대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모화되고 정례화된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직거래에 참여하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소매유통업체에게는 매취자금을 확대 지원하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건설·개장과 도매기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하역시설개선과 함께 전자경매제도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상장경매제외에 도매상제도를 도입하여 출하자의 선택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유통비용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

해 물류기기 용기·설비를 ULS에 맞게 정비하고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계·장비지원을 확대하며, 디지털 유통체계에 맞춰 농산물의 포장규격을 재정비하고 농산물에 바코드를 도입하여 전자상거래 등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안전 농산물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과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신선농산물유통을 위한 Cold Chain System구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GMO농산물의 표시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같은 유통개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산물유통예산을 대폭 늘려 농림투자예산액 중 유통부문투자비중을 '98년의 6%에서 '99년 15%, 2000년 23%로 늘려나가고 2002년에는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